

2026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 경 정 (1교시) >

- 행정법(01), 국제법(02) -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응시자 유의사항

- 본인의 응시계급, 교시, 과목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시험이 시작되면 신속히 페이지를 넘겨 인쇄 상태 등 파본여부를 확인바랍니다.
- 문제지에 이상이 있는 경우 교체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이를 확인하지 않거나 교체를 요구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의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성 명 :

응 시 번 호 :

해 양 경 찰 청

행 정 법

1. 다음 중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계약에 근거한 권리 행사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였더라도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는 행정처분이다.
- ② 기부자가 기부채납한 부동산을 일정기간 무상 사용한 후에 한 사용허가기간 연장신청을 거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행위는 사법상의 행위이다.
- ③ 조달청장이 법령에 근거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사법관계에 해당한다.
- ④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는 사립학교의 공적 성격을 고려할 때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2. 다음 중 행정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관계법령상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어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의 철거 등 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 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등의 협의취득은 사법상 계약에 해당하므로, 협의취득시 부담한 의무는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③ 자기완결적 신고에 해당하는 대문설치신고가 형식적 하자가 없는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임에도 불구하고 관할 행정청이 수리를 거부한 후 당해 대문의 철거명령을 하였더라도, 후행행위인 대문철거 대집행계고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 ④ 대집행의 실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행위가 위법한 것이라는 이유로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 등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

3. 다음 중 행정법의 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정규칙이 법규성을 가지는 경우에는 법원성을 인정할 수 있다.
- ② 법원은 보충적 법원으로서의 조리에 따라 재판할 수 있다.
- ③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은 처분청이 아닌 제3자 행정청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 ④ 처분적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해당한다.

4. 다음 중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보기 > —

- ㉠ 이행강제금은 장래의 의무이행을 심리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의무이행이 있을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
- ㉡ 과징금 부과처분의 경우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아니하나, 위반자의 의무해태를 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 ㉢ 「건축법」상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행정청은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선택적 활용이 중첩적 제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처분은 처분의 상대방이 이의제기하지 않은 채 납부기간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상 통고처분과 마찬가지로 그 효력을 상실한다.
- ㉤ 「농지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에 불복하는 경우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5. 다음 중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감염병 환자의 강제입원
- ②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보호조치
- ③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의 부과
- ④ 「도로교통법」상의 위법인공구조물에 대한 제거

6. 다음 중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정관행이 위법한 경우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행정청은 자기구속을 당하지 않는다.
- ② 행정청이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는지를 판단할 때는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다.
- ③ 실권의 법리는 일반적으로 신뢰보호원칙의 적용 영역의 하나로 설명되고 있으나, 판례는 신의성실 원칙의 파생원칙으로 보고 있다.
- ④ 법령이나 비권력적 사실행위인 행정지도 등은 신뢰의 대상이 되는 선행조치에 포함되지 않는다.

7. 다음 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구 「하천법」에 의한 하천수 사용권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손실보상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해당한다.
- ②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행정소송제기는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 ③ 사업인정은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그 후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하여 주는 형성행위이다.
- ④ 어떤 보상항목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함에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못된 내용의 재결을 한 경우에는, 피보상자는 관할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8. 다음 행정의 법원칙 중 「행정기본법」에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은?

- ①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 ②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 ③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 ④ 평등의 원칙

9. 다음 중 행정상 강제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매처분을 하면서 채납자 등에게 공매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공매통지를 하였더라도 그것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절차상의 흠이 있어 그 공매처분은 위법하다.
- ②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징수를 위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그 재산의 가액이 징수할 국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가 당연무효의 처분이다.
- ③ 한국자산공사의 공매통지는 공매의 요건이 아니라 공매사실 자체를 채납자에게 알려주는 데 불과한 것으로, 통지의 상대방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것 역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④ 한국자산공사가 당해 부동산을 인터넷을 통하여 재공매(입찰)하기로 한 결정 자체는 내부적인 의사결정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10. 다음 중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세무조사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 ② 「행정절차법」은 행정조사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 ③ 「행정조사기본법」은 행정조사 실시를 위한 일반적인 근거규범으로서 행정기관은 다른 법령 등에서 따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행정조사기본법」을 근거로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④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성분분석 등의 검사가 압수·수색영장 없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지 않다.

11. 다음 <보기> 중 행정주체 및 행정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보기 > —

- ㉠ 한국토지공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구 「토지공사법」 및 동법 시행령의 위탁에 의하여 대집행을 수권받은 자로서 공무원인 대집행을 실시함에 따르는 권리·의무 및 책임이 귀속되는 행정주체의 지위에 있다고 볼 것이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으로서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 ㉡ 지방법무사회는 법무사 감독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설립과 법무사의 회원가입이 강제된 공법인으로서 법무사 사무원 채용승인에 관한 한 공권력 행사의 주체라고 보아야 한다.
- ㉢ 한국마사회가 조교사 또는 기수의 면허를 부여하거나 취소하는 것은 국가 기타 행정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행정청으로서의 권한 행사이다.
- ㉣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공공단체로서, 그 설립행위 등을 통해 서울특별시로부터 서울특별시의 개발사업 시행 권한을 위임받은 행정청으로 볼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2. 다음 중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질서위반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②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은 행위 시의 법률을 따르고 과태료 처분은 판결 시의 법률에 따른다.
- ③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발생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어 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법정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④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므로 행정질서벌에는 형법총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13. 다음 중 개인적 공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은 입안권자에게 도시계획입안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없다.
- ② 상수원보호구역 설정의 근거가 되는 규정이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일 뿐이고, 그 상수원에서 급수를 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가지는 상수원의 오염을 막아 양질의 급수를 받을 이익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호라는 공공의 이익이 달성됨에 따라 반사적으로 얻게 되는 이익에 불과하다.
- ③ 공무원연금수급권은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급부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헌법규정만으로는 이를 실현할 수 없어 법률에 의한 형성이 필요하다.
- ④ 제소기간이 이미 도과하여 불가쟁력이 생긴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개별 법규에서 그 변경을 요구할 신청권을 규정하고 있거나 관계 법령의 해석상 그러한 신청권이 인정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민에게 그 행정처분의 변경을 구할 신청권이 있다 할 수 없다.

14. 다음 중 통고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통고처분은 현행법상 조세법, 관세법, 출입국관리사법, 교통사법 등에 대하여 인정되고 있다.
- ② 통고처분에 의해 부과된 금액(벌칙금)은 벌금이다.
- ③ 판례는 통고처분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 ④ 판례는 통고처분에 의해 부과된 벌칙금을 납부한 경우 다시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벌칙금 납부에 확정재판의 효력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하고 있다.

15. 다음 중 「행정기본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법령등을 공포한 날을 첫날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② 대통령령의 위임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훈령·예규 및 고시 등 행정규칙은 ‘법령’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③ 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그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 ④ 법령등 또는 처분에서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권익이 제한되거나 의무가 지속되는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기간의 첫날을 산입한다. 다만, 국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6. 다음 중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정절차법」 제17조는 행정청으로 하여금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기 전에 신청인에게 신청의 내용이나 처분의 실체적 발급요건에 관한 사항을 보완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할 의무를 정하고 있다.
- ②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일반적인 건축신고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아야 한다.
- ③ 「건축법」에 따른 착공신고가 반려되었음에도 당해 건축물의 착공을 개시하면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벌금 등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행정청의 착공신고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 ④ 「수산업법」상 어업의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다.

17. 다음 중 행정상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보기 —

- ㉠ 행위 자체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보여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실질적으로 직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행위는 「국가배상법」 소정의 ‘직무를 집행하면서’ 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 국가 등의 가해공무원에 대한 구상권은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인정된다.
- ㉢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관계 법규를 알지 못하거나 필요한 지식을 갖추지 못하여 법규의 해석을 그르쳐 잘못된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그가 법률전문가가 아닌 행정직 공무원이라고 하여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
- ㉣ 변호인의 접견신청을 허용하지 않아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접견 불허결정을 한 공무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 법률전문가 아닌 행정공무원에게 시행령이 상위 법규에 위배되는지 여부까지 사법적으로 심사하여 그 적용을 거부할 것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8. 다음 중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정 각부의 장이 정하는 고시(告示)는 법령의 규정으로부터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아 그 법령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가진 경우라도 그 형식상 대외적으로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 ② 법규명령이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라면 나중에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더라도 유효한 법규명령이 될 수 없다.
- ③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열거적인 것이다.
- ④ 법원이 구체적 규범통제를 통해 위헌·위법으로 선언할 심판대상은 원칙적으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 조항에 한정된다.

19. 다음 중 국가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국가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행정 주체가 사경제 주체로서 하는 작용도 포함된다.
- ② 청구기간 내에 헌법소원이 적법하게 제기되었음에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청구기간을 오인하여 각하결정을 한 경우, 이에 대한 불복절차 내지 시정절차가 없는 때에는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 ③ 군 복무 중 사망한 군인 등의 유족인 원고가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국가는 「군인연금법」상 소정의 사망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원고가 받은 손해배상금 상당 금액을 공제할 수 없다.
- ④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 해당 국가와 상호보증이 없더라도 「국가배상법」이 적용된다.

20. 다음 중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구호대상자를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기간은 24 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구호대상자가 휴대하고 있는 무기·흉기 등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을 경찰관서에 임시로 영치하는 기간은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는 그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경우라도 그 손실 전부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다.
- ③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고인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불심검문이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
- ④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경찰관의 직무에 해당한다.

21. 다음 중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국가의 철도운행사업은 국가가 공권력의 행사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경제적 작용이라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한 사고에 공무원이 간여하였다 하더라도 「국가배상법」을 적용할 것이 아니고 일반 민법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 ② 행정지도와 같은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공무원의 직무행위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 ③ 항고소송에서 처분이 위법하다고 확인되었다면, 국가배상소송에서 바로 처분을 한 공무원의 과실이 인정된다.
- ④ 공무원에게 경과실이 있는 경우 피해자에게 민사 책임을 지지 않지만 만일 공무원이 피해자에게 배상했다면 국가에 대해 구상할 수는 없다.

22. 다음 중 경찰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위책임이나 상태책임 모두 고의·과실을 묻지 않는다.
- ② 자신의 보호·감독하에 있는 자에 대하여 지는 경찰책임은 자기책임이다.
- ③ 행위책임에 있어서 그 주체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되나, 권리능력 없는 사단은 포함되지 않는다.
- ④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경찰책임을 부담한다.

23. 다음 중 판례에 의할 때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명의변경신청 거부행위
- ② 건축물 용도변경신청 거부행위
- ③ 토지대장의 직권말소 행위
- ④ 지적공부 소관청이 지목변경신청을 반려한 행위

24. 다음 중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안경사시험합격취소처분과 안경사면허취소처분
- ② 개별공시지가결정과 과세처분
- ③ 과세처분과 채납처분
- ④ 귀속재산의 임대처분과 후행매각처분

25. 다음 중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일반 공중이 사용하는 공공용물 외에 행정주체가 직접 사용하는 공용물이나 하천과 같은 자연공물도 「국가배상법」 제5조의 ‘공공의 영조물’에 포함된다.
- ② 영조물의 하자 유무는 객관적 견지에서 본 안전성의 문제이며, 국가의 예산 부족으로 인해 영조물의 설치·관리에 하자가 생긴 경우에도 국가는 면책될 수 없다.
- ③ 고속도로의 관리상 하자가 인정되더라도 고속도로의 관리상 하자를 판단할 때 고속도로의 점유관리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해태하였다는 주장·입증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
- ④ 소음 등의 공해로 인해 법적 쟁송이 제기되거나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이 실시되는 등 피해지역 임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이러한 사실이 그 지역에 널리 알려진 이후에 이주하여 오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위험에의 접근에 따른 가해자의 면책 여부를 보다 적극적으로 인정할 여지가 있다.

26. 다음 중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허가에 붙은 기한의 종기 도래로 허가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기한연장신청 거부에 대한 집행정지로 인해 그 효력이 회복되므로 집행정지신청의 이익이 있다.
- ② 어업면허처분 중 면허의 유효기간만 취소하여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 ③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는데, 그러한 조건은 해당 처분과 실질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④ 법정부관에 대하여는 행정행위에 부관을 붙일 수 있는 한계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이 적용된다.

27. 다음 중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국가 등 과세주체가 당해 확정된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납세의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조세채권존재확인의 소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 ② 광주광역시립합창단원으로서 위촉기간이 만료되는 자들의 재위촉신청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문화예술회관장이 실기와 근무성적에 대한 평정을 실시하여 재위촉을 하지 아니한 것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불합격처분이라고 할 수 있다.
- ③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공법상 당사자 소송이다.
- ④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공무원연금법령의 개정 사실과 연금퇴직수급자가 퇴직연금 중 일부금액의 지급정지대상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통보한 경우, 위 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28. 다음 중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의무이행심판은 현행법상 인정된다.
- ②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하지 못한다.
- ③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해서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경우는 물론 직권으로도 임시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29. 다음 중 행정처분의 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의 경우 전자문서가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
- ② 보통우편에 의한 송달과 달리 등기우편에 의한 송달은 반송 등 기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배달된 것으로 추정된다.
- ③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곳에 등기에 의한 우편송달을 한 경우 우편물이 수취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 ④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자에 대한 송달기간 및 기한은 행정청이 그 우편이나 통신에 걸리는 일수를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30. 다음 중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조세부과처분이 무효라 하더라도 그로써 압류 등 채납처분의 효력을 다룰 수는 없다.
- ② 구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 여부에 관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절차를 누락한 행정처분은 무효이다.
- ③ 수익적 행정행위의 거부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 ④ 행정행위의 내용상의 하자에 대해서는 하자의 치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31. 다음 중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정심판청구가 부적합하지 않음에도 각하한 재결은 심판청구인의 실체심리를 받을 권리를 박탈한 것으로 원처분에 없는 고유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 ② 선정대표자가 선정되더라도 다른 청구인들은 그 선정대표자를 통해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③ 「행정심판법」상 임시처분은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 ④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심판청구를 한 경우 행정심판위원회는 재결서의 등본을 지체 없이 피청구인을 거쳐 처분의 상대방에게 송달 하여야 한다.

32. 다음 중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고지절차에 관한 규정은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그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절차를 밟는 데 있어 편의를 제공하려는 데 있으며 처분청이 위 규정에 따른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심판의 제기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 것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어떤 하자가 수반된다고 할 수 없다.
- ②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이 국세청장에 대한 불복심사 청구에 의하여 그 불복사유가 이유있다고 인정되어 취소되었음에도 처분청이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없이 부과처분을 되풀이 한 경우 그 부과처분이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른 것이라면 위법하지 않다.
- ③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 ④ 행정심판의 재결은 피청구인 또는 행정심판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33. 다음 중 「행정기본법」상 처분의 재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처분으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제3자는 해당 처분에 대해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처분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그러한 처분은 재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 ③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등 처분에 관한 사항은 재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 ④ 처분의 재심사 결과 중 처분을 유지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통해 불복할 수 없다.

34. 다음 중 행정상 손실보상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토지소유자가 행정소송으로 손실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 ② 손실보상은 공공필요에 의한 행정작용에 의하여 사인에게 발생한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전보라는 점에서 그 사인에게 특별한 희생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히 요구되는 것이고, 공유수면매립면허의 고시가 있다고 하여 반드시 간척사업이 시행되고 그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
- ③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 민간기업에게 산업단지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은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공필요’에 위반되지 않는다.
- ④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적법하게 시행된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된 주거용 건축물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은 공법상 권리이고, 주거이전비 보상청구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35. 다음 중 「행정소송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경찰청장을 피고로 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 제1심 관할법원으로 될 수 있다.
- 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
- ③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
- ④ 법원은 행정청이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소가 제기된 후 변경한 때에는 원고의 신청이 없더라도 결정으로써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변경할 수 있다.

36. 다음 중 「행정절차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정응원을 위하여 파견된 직원은 당해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 ② 절차적 규정뿐만 아니라 신뢰보호원칙과 같이 실체적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 ③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미국 국적을 가진 교민에 대한 사증거부처분에 대해서도 처분의 방식에 관한 「행정절차법」 제24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 ④ 송달이 불가능하여 관보, 공보 등에 공고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어 효력 발생 시기를 달리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37. 다음 중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②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 ③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다수인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 ④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38. 다음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포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유아교육법」에 따른 사립유치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③ 공개거부결정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의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서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모든 국민은 정보공개청구권을 가지며, 여기서 국민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재단도 포함된다.

39. 다음 중 「행정소송법」에 따른 집행정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처분의 효력정지결정을 하려면 그 효력정지를 구하는 당해 행정처분에 대한 본안소송이 법원에 제기되어 계속 중임을 요건으로 한다.
- ② 거부처분의 효력정지는 그 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생길 손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하므로 신청인에게는 그 효력정지를 구할 이익이 있다.
- ③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 ④ 신청인의 본안청구의 이유 없음이 명백할 때에는 집행정지가 인정되지 않는다.

40. 다음 중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에게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
-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더라도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국 제 법

1. 관습국제법의 성립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ICJ) 판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Legality of the Threat or Use of Nuclear Weapons에 관한 권고적 의견에서는 총회의 결의를 통해 핵무기의 불법성에 관한 법적 확신이 확립되지 못한 근거의 하나로 관련 결의가 상당수의 반대 또는 기권에도 불구하고 채택되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 ② Asylum(Colombia v. Peru) 사건에서는 중남미 국가에 특유한 지역관습법이 성립될 수 있는 가능성 자체를 인정하였으나, 해당 사건에서 콜롬비아가 주장하는 내용의 지역관습법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 ③ North Sea Continental Shelf (Germany/Netherlands) 사건에서는 관습국제법은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확립되는 일반관행에 기초하므로 단기간에는 성립할 수 없다고 밝혔다.
- ④ Legal Consequences of the Construction of a Wall in the Occupied Palestinian Territory에 관한 권고적 의견에서는 국제사회에서 널리 지지 받는 국제조약을 관습국제법의 형성과 존재를 확인하는 증거로 보았다.

2. 국제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제해사기구(IMO)는 유엔의 전문기구로 조선·해운과 관련된 안전, 해양환경 보호, 해상교통 촉진 등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다.
- ② 세계기상기구(WMO)는 유엔의 전문기구로 기상 관측 및 이용 등에 관련된 세계 각국의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 ③ 세계보건기구(WHO)는 유엔의 전문기구로 인간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 ④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유엔의 전문기구로 핵시설의 안전, 방사능 오염방지 등에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다.

3.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의 전권위임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 < 보기 > —

- ㉠ 외교공관장은 전권위임장을 제시하지 않아도 조약의 체결에 관련된 모든 행위를 수행할 목적으로 자국을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 ㉡ 국제회의에 파견된 대표가 그 국제회의에서 조약문을 채택하기 위해서는 전권위임장을 제시하여야 자국을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 ㉢ 대한민국 국무총리는 전권위임장을 제시하지 않아도 조약의 체결에 관련된 모든 행위를 수행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 ㉣ 법무부장관은 전권위임장을 제시하는 경우 조약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를 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	㉡	㉢	㉣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4. 국가책임과 관련된 국제재판소의 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호르쥬 공장(Chorzów Factory) 사건에서는 조약 위반 등 국제법 위반행위가 배상 의무를 야기한다고 판결하였다.
- ② 코르푸 해협(Corfu Channel) 사건에서는 국제법 위반행위가 작위, 부작위 모두를 통해 가능하다고 판결하였다.
- ③ 라그랑(LaGrand) 사건에서는 주정부 행위가 연방정부 행위로 귀속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 ④ 1974년 핵실험(Nuclear Tests) 사건에서는 국가의 일방적 행위를 통해서도 국제의무가 창설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5. 자위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내용으로 묶은 것은?

< 보기 >

- ㉠ UN은 상대방으로부터 위법한 무력공격이 없더라도 그 징후가 뚜렷하다면 미리 이를 타격할 수 있다는 예방적(anticipatory) 자위권의 행사가 허용된다는 논리를 지지하고 있다.
- ㉡ 비정규군이나 무장단체, 용병의 무력행사도 그 규모와 효과에 따라 자위권의 행사대상인 무력공격에 해당할 수 있다.
- ㉢ 1834년 'Caroline호 사건'을 통해 미국의 국무장관 Daniel Webster는 자위권을 행사할 필요성은 '급박하고, 압도적이며, 다른 수단을 선택할 여지가 없고, 숙고할 여지가 없으며, 그 내용이 비합리적이거나 과도한 행사가 아닌 경우'에 인정됨을 주장하였다.
- ㉣ UN헌장은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 ① ㉠, ㉡ ② ㉠, ㉣
- ③ ㉡, ㉣ ④ ㉢, ㉣

6. 1963년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영사의 직무에 해당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기 >

- ㉠ 접수국 내에서 파견국과 그 국민의 이익보호
- ㉡ 파견국과 접수국 간의 조약 체결
- ㉢ 파견국과 접수국 간의 통상 및 우호관계의 촉진
- ㉣ 자국민에 대한 여권 발급 및 타국민에 대한 입국사증 발급
- ㉤ 접수국 사정을 조사하여 이를 본국 정부에 보고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제공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7. 다음 분쟁해결기관 중 그 해결방식이 다른 것은?

- ① UN해양법재판소(ITLOS)
- ② 국제사법재판소(ICJ)
- ③ 유럽사법재판소(ECJ)
- ④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8. UN안전보장이사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일차적 책임(primary responsibility)은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나, 안전보장이사회가 자신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이차적으로 총회가 개입할 수 있다.
- ② 안전보장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제사법재판소(ICJ)의 판결을 집행하기 위하여 권고하거나 취하여야 할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 ③ 안전보장이사회의 강제조치에 관한 결정은 그 조치의 대상이 되는 국가에게만 구속력을 가진다.
- ④ 절차사항에 관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은 9개 이사국의 찬성투표로 한다.

9. 개인의 국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적의 부여요건을 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각국의 국내 문제이다.
- ② 국가는 자국민을 위한 외교적 보호의 권리를 갖는다.
- ③ 국제사법재판소(ICJ)는 Nottebohm 사건에서 청구국과 그 국민사이에 진정한 관련(genuine link)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외교적 보호권이 발생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 ④ 이중국적자가 제3국으로부터 침해를 받은 경우 그의 국적국가들은 해당 제3국에 대하여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없다.

10.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20조가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제공을 거부하는 조치
- ② 금·은의 수출 또는 수입에 관한 조치
- ③ 공중도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 ④ 교도소 노동상품에 관한 조치

11.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의하는 경우 조약의 해석 목적상 문맥(context)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 ① 조약 체결과 관련된 모든 당사국 간의 합의
- ② 당사국이 수락한 조약과 관련된 문서
- ③ 당해 조약의 전문과 부속서
- ④ 조약 체결시 상황과 교섭 기록

12. 개인통보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조약으로만 묶은 것은?

< 보기 >

- ㉠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13. 무해통항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무해통항권이란 선박이 연안국의 사전허가나 연안국에 대한 사전통고 없이도 외국영해를 무해하게 통과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② 잠수함은 타국의 영해에서 해면 위로 부상하여 국기를 게양하고 항행한다.
③ UN해양법협약 제8조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직선기선을 설정함으로써 종전에 내수가 아니었던 수역이 내수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무해통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연안국은 무해통항권을 행사하는 외국선박이라 하더라도 유조선, 핵추진선박 그리고 핵물질 또는 그 밖의 유해한 물질을 운반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지정된 항로대만을 통항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4. 국제법상 영토의 취득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선점이 성립하려면 주권자로서 행동하려는 의사와 실효적 지배가 필요하다.
② 서부 사하라(Western Sahara) 사건에서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조직화된 부족들의 거주지는 무주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③ 본토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무인도에 대하여는 비교적 약한 정도의 실효적 지배로 충분하다.
④ 시효는 무주지를 장기간 점유하여 영토를 취득하는 것이다.

15. 국제환경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Trail Smelter 사건은 어느 국가도 타국의 영토 또는 그 안의 재산이나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방식으로 자국 영토를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하여 국제환경법의 발달에 기여하였다.
②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인간의 활동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는 환경영향평가는 아직까지 국제법상 국가의 의무로 인정되지 않는다.
③ 사전주의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은 생물다양성협약, 기후변화협약 등 다양한 국제환경조약에 규정되어 있다.
④ 오염자부담원칙은 오염방제의 비용에 관한 원칙으로서 법적인 측면보다는 경제정책적인 측면이 강한 원칙이다.

16. 국제환경법의 주요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1996년 런던담핑의정서는 해양환경에 유입되는 폐기물 또는 그 밖의 물질이 그 영향과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단정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를 발생시킨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으면 동 물질을 해양에 투기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사전배려의 원칙을 채택하였다.
② 1969년 유류오염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의 규정은 군함 또는 국가에 의하여 소유되거나 운영되는 선박으로서 당분간 정부의 비상업적 역무에 사용되는 것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③ 중재법원은 Lanoux호 사건에서 국가는 자국의 관할권 내 국제하천을 이용하기 위하여 타국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국제관습법상 협의의무를 확인하였다.
④ 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는 Meuse강 사건에서 국가는 월경피해금지의무를 부담하며 이는 사전배려의 원칙에 의거한 피해예방의무로 발전하였다고 인정하였다.

17.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기 >

- ㉠ 18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 ㉡ 재판소의 재판관은 9년의 임기로 선출되며 재선될 수 없다.
- ㉢ 재판소의 재판은 단심으로 종결되나, 판결의 선고 당시 알지 못하였던 결정적인 새로운 사실의 발견을 원인으로 하는 재심이 허용된다.
- ㉣ 재판소의 임시재판관(judge ad hoc)이란 재판관 중에 해당 소송사건의 당사국 국적을 가진 재판관이 없을 경우에 임시로 선임되는 재판관을 말한다.
- ㉤ 재판소의 판결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존중된다.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18. 다음 중 국제사법재판소(ICJ)의 재판절차상 소송 참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송참가를 하고자 하는 제3국은 소송참가의 필요성을 입증해야 하며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 ② 국제공기구(public international organizations)가 당사자인 조약의 해석이 문제되는 ICJ 소송에서 그 국제공기구는 소송참가를 할 수 없고 단지 의견제출만 가능하다.
- ③ 사건의 결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법률적 성질의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제3국에 대하여 ICJ는 소송참가를 허용할 수 있다.
- ④ 협약의 해석이 문제가 되는 소송에서 기존 소송 당사국이 아닌 그 협약의 당사국이 소송에 참가할 경우, 그 국가는 판결에 의하여 부여된 해석에 구속되지 않는다.

19. GATT체제와 비교되는 WTO협정체제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GATT체제에서는 협정운동을 위한 일반적 국제 기구가 존재하지 않았으나, WTO협정체제는 일반적 국제기구로서 세계무역기구를 창설하였다.
- ② GATT체제에서는 당사국간 무역분쟁해결을 위한 분쟁해결 절차가 없었으나, WTO협정체제는 명료하고 신속한 분쟁해결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 ③ GATT체제가 상품무역에 대한 규율에 중점을 둔 반면, WTO협정체제는 서비스, 지적재산권 및 무역관련 투자도 규율 대상에 포함하였다.
- ④ '1947년 GATT'를 포함하는 '1994년 GATT'는 WTO협정체제의 일부를 구성한다.

20. K국은 소주에 대해서는 30%의 세율을, 위스키에 대해서는 100%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K국 내에서 소주는 K국 업체들에 의해 전량 제조되고, 위스키는 A국과 B국 업체들로부터 전량 수입되고 있다. K국, A국, B국은 모두 WTO회원국이다. A국과 B국이 K국을 WTO에 제소할 경우, WTO 협정상 의무위반의 근거 규정으로 옳은 것은?

- ① GATT 제1조상 최혜국대우
- ② GATT 제2조상 관세양허약속
- ③ GATT 제3조상 내국민대우
- ④ GATT 제12조상 국제수지의 보호를 위한 제한

21. 세계무역기구(WTO) 설립협정상 WTO의 기능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WTO는 WTO 설립협정 및 다자간 무역협정의 이행, 관리, 운영을 촉진한다.
- ② WTO는 WTO 설립협정 부속서 3에 규정된 무역 정책검토 제도를 시행한다.
- ③ WTO는 WTO 설립협정에 부속된 협정들에 관련된 다자간 무역관계와 관련 회원국들 간 협상의 장(forum)을 제공한다.
- ④ WTO는 세계경제 정책 결정에 있어서 일관성 제고를 위하여 UN경제사회이사회와 협력한다.

22.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1994년도 GATT 제23조 제1항(b)에 규정된 형태의 비위반제소의 경우 이익의 무효화 또는 침해의 입증책임은 제소국에게 있다.
- ② 1994년도 GATT 제23조 제1항(b)에 규정된 형태의 비위반제소의 경우 피제소국은 패소하더라도 GATT/WTO 협정상의 어떤 구체적인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상조치를 철회할 의무는 없다.
- ③ 분쟁당사국 뿐만 아니라, 패널의 사안에 대한 실질적 이익을 갖고 있음을 분쟁해결기구에 통고한 제3국도 상소할 수 있다.
- ④ 분쟁해결기구의 상소기관에 의한 보고서 채택은 역충의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그 보고서는 사실상 자동적으로 채택된다고 할 수 있다.

23.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중앙 정부가 자신을 상대로 반란을 일으킨 단체를 교전단체로 승인한 경우 생포된 교전단체 소속 전투원은 포로의 지위를 누린다.
- ② 정당성이 없거나 억압적인 체제에 대항하고, 민주적 정부체제를 지지하거나 수립하기 위한 무력개입은 국제관습법에서 인정된다.
- ③ 타국 내에서 극악한 인권침해로 인하여 대규모 난민이 발생하거나 전국적으로 인도에 반한 죄가 빈번한 경우 어느 국가든지 '보호책임법리'에 의하여 그 국가에 대해서 무력을 사용하는 것이 국제관습법에서 인정된다.
- ④ 어느 국가의 인도주의적 위기사태로 인하여 발생한 다수의 실향민이나 난민에게 구호품이 안전하게 전달되도록 하기 위하여 외국의 군대가 출동하는 경우 UN안전보장이사회는 이를 불법적인 무력사용으로 간주하여 허가한 적이 없다.

24.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주요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 보기 > —
- ㉠ 조세조치의 경우 '동종제품관계' 뿐만 아니라 '직접경쟁 또는 대체상품관계'에까지 내국민대우가 적용된다.
 - ㉡ 최혜국대우는 동종제품에 대한 법률상의 차별 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차별도 금지한다.
 - ㉢ WTO 패널 및 상소기구는 일관되게 시장기반설(Market-based Approach)만을 고려하여 제품의 동종성 여부를 판정하였다.
 - ㉣ 내국민대우는 동종의 국내제품에 부여하고 있는 대우를 동일하게 수입제품에 부여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동종의 국내제품보다 수입제품에 대한 유리한 대우는 내국민대우 위반이다.

- ① ㉠, ㉡ ② ㉠, ㉣ ③ ㉡, ㉣ ④ ㉢, ㉣

25. 환경 관련 국제협약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1987년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의정서는 비 당사국들과 통제 물질을 교역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환경과 무역을 연계시키고 있다.
- ② 1985년 오존층보호협약에 따르면 협약 당사국은 개도국에 대해 기술을 신속히 이전할 의무를 부담한다.
- ③ 1999년 바젤책임배상 의정서는 국경을 넘는 대기 오염에 있어서의 지역적 협력을 의무화하고 있다.
- ④ 1972년 런던뎀핑협약은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를 제한하고 있다.

26. 대한민국 「범죄인 인도법」상 임의적 인도거절사유가 아닌 것은?

- ①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 ② 범죄인이 인도범죄 외의 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 ③ 인도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범죄인을 인도하는 것이 비인도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 ④ 대한민국 또는 청구국의 법률에 의하여 인도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또는 형의시효가 완성된 경우

27. 국제환경법상 일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 1989년 「유해폐기물의 월경 이동 및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은 유해폐기물 또는 그 밖의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알게 되는 즉시 해당 국가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는 국가 간 협력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 ㉡ 1992년 「국경을 넘는 수로와 국제호수의 보호와 이용에 관한 협약」은 환경오염을 유발한 책임이 있는 자가 오염의 방지와 제거를 위한 비용을 담당해야 한다는 오염자부담 원칙을 수용하였다.
- ㉢ 1991년 「월경 차원의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협약」은 당사국은 사업계획으로부터 국경을 넘어선 환경에 대한 심각한 악영향을 방지·경감·통제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하고도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예방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 ㉣ 1979년 「장거리 월경 대기오염협약」은 오존층 보호를 위해 각국이 오염에 기여한 정도와 능력에 따라 차별적인 책임을 진다는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28.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기 >

- ㉠ ICC규정의 당사국이 되면 자동적으로 ICC의 관할권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 ㉡ 국가원수로서의 공적 지위는 형사책임을 면제시켜 주지 않는다.
- ㉢ ICC 관할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 ㉣ ICC는 자연인 뿐만 아니라 범죄에 연루된 법인에게도 관할권을 가진다.
- ㉤ ICC규정에 의한 처벌은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29.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보기 >

-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발생한 선박의 충돌이나 항행사고에 대하여 연안국 선박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 피해 선박의 기국 또는 연안국이 형사 관할권을 행사한다.
- ㉡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는 M/V Saiga 사건에서 연안국은 제3국 선박이 연안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다른 선박에 연료를 판매한 행위에 대하여 관세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다.
- ㉢ 대항국과 인접국간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를 중간선 원칙과 등거리 원칙에 따라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는 M/V Virginia G 사건에서 연안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로 활동을 하는 선박에 연료를 공급하는 제3국의 선박을 규제할 수 있다고 보았다.

- ① ㉠, ㉡ ② ㉠, ㉢ ③ ㉡, ㉣ ④ ㉡, ㉣

30. 개인의 국제법적 지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 일반적으로 개인에게는 조약체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 개인은 제한적으로 국제법상의 권리를 향유하고 의무를 부담한다.
- ㉢ 국제재판소에서 아직까지 개인이 직접 제소할 수 있는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
- ㉣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들어와 국제형사재판을 통하여 전쟁범죄자들을 처벌하기 시작하였다.

31. 다음 중 “각국은 다른 국가의 신정권에 대하여 그 성립이나 법적 자격의 정당성 여부 등 국내문제에 대한 가치판단을 하는 것을 억제하여야 하고, 국가로서 이미 승인되어 있는 이상 그 국내에서 혁명에 의하여 정부가 교체되더라도 정부승인의 행위는 불필요하며, 외교관계의 지속 여부만을 결정하면 된다.”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정책은?

- ㉠ 에스트라다주의
- ㉡ 월슨주의
- ㉢ 토마르주의
- ㉣ 드라고 독트린

32. UN안전보장이사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

< 보기 >

- ㉠ 안전보장이사회는 15개 국제연합 회원국으로 구성된다.
- ㉡ 비상임이사국의 임기는 3년이다.
- ㉢ 절차사항에 관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은 9개 이사국의 찬성투표로써 한다.
- ㉣ 안전보장이사회의 이사국이 아닌 국제연합회원국도 안전보장이사회가 그 회원국의 이해에 특히 영향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언제든지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된 어떠한 문제의 토의에도 참가하여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 ㉤ 안전보장이사회가 계속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각 이사국은 UN소재지에 항상 대표를 두어야 한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33. 국가책임 관련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불가항력에 해당하는 상황은 자연적 또는 물리적 상황으로 발생될 수 있으나, 인간의 행위로는 발생될 수 없다.
- ② 긴급피난은 대응조치, 자위 등의 사유와 같이 선행되는 국제의무 위반행위를 전제로 한다.
- ③ 불가항력과 달리 조난의 경우, 행위주체의 측면에서 의무의 준수 여부는 선택적이라 할 수 있다.
- ④ 동의국이 상대국에게 사후 동의를 부여하는 경우, 이는 동의국의 상대국에 대한 책임추궁권을 저해하지 않는다.

34. 국가승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신생국에 대한 국가승인은 일방적 행위이고 기존 국가들은 신생국에 대한 국가승인의 국제법상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 ② 개별국가에 의한 승인의 효과는 승인국과 피승인국 사이에서만 발생한다.
- ③ 묵시적 승인을 의미하는 행위 유형은 비교적 명확하며 통상대표부의 설치 허가나 신생국을 포함하는 국제회담의 제안 및 개최가 이에 해당한다.
- ④ 타국에 대한 외교관계의 단절 선언은 이미 행하여진 법률상 승인의 철회를 의미하지 아니한다.

35.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조약규정의 가분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일반국제법의 강행규범과 충돌하는 조약의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조약규정의 분리는 허용되지 않는다.
- ② 조약규정의 가분성은 조약종료 시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조약무효 시에만 문제된다.
- ③ 국가대표에 대한 강제를 원용할 권리가 있는 국가는 조약 전체의 무효원용 또는 특정조항에 대한 무효원용 중 선택할 수 있다.
- ④ 기만에 의해 체결된 조약의 무효를 원용할 권리가 있는 국가는 오직 특정 조항에 대해서만 무효원용을 주장할 수 있다.

36.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방법을 도표화한 것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분류		해결 수단
분쟁당사자 간 해결		협약·(㉠)
제3자 개입에 의한 해결	정치적 해결	주선·중개·심사·(㉡)
	법적 해결	(㉢)·사법재판

	㉠	㉡	㉢
①	패널	조정	중재
②	교섭	패널	중재
③	교섭	조정	중재
④	교섭	중재	조정

37.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이 규정하고 있는 강행규범(jus cogens)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보기 > —

- ㉠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은 일반국제법의 강행규범 개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 일반국제법의 새로운 강행규범이 출현하는 경우에 그 규범과 충돌하는 현행 조약은 소급하여 무효이다.
- ㉢ 강행규범은 그 이탈이 허용되지 않는 규범이다.
- ㉣ 강행규범은 동일한 성질을 가진 일반국제법의 추후규범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다.
- ㉤ 바르셀로나 전기·전력회사 사건에서 국제사법재판소는 강행규범의 내용을 명시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38. 신사협정(Gentlemen's Agreement)에 관한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은?

— < 보기 > —

- ㉠ 신사협정의 예로는 1941년 대서양헌장과 1975년 헬싱키 최종의정서 등을 들 수 있다.
- ㉡ 신사협정에는 선언, 양해각서, 합의서 등의 명칭이 사용된다.
- ㉢ 신사협정의 위반에는 국제법상의 국가책임을 발생시킨다.
- ㉣ 신사협정이 정부수반에 의하여 체결되는 경우 법적 구속력이 부여된다.
- ㉤ 신사협정의 이행은 자발적 의사에 기초한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39. 「UN해양법협약」상 공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가는 공해의 일부를 자국의 주권하에 둘 수 없다.
- ② 공해의 자유에는 항행의 자유, 상공비행의 자유, 해저전선과 관선 부설의 자유 등이 포함된다.
- ③ 공해상의 선박에 대하여는 기국이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한다.
- ④ 공해상의 무허가방송 종사자에 대하여는 선박의 기국, 종사자의 국적국만이 형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40. 국제법 연원의 상호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 < 보기 > —

- ㉠ UN헌장과 강행규범이 충돌하는 경우 강행규범의 의무가 우선한다는 견해가 있다.
- ㉡ 강행규범과 임의규범이 충돌하는 경우 임의규범은 무효화되거나 효력을 상실한다.
- ㉢ UN헌장과 기타 국제법상 의무가 충돌하는 경우 신법우선의 원칙 및 특별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해결한다.
- ㉣ 강행규범을 제외한 ‘조약’, ‘국제관습법’ 및 ‘법의 일반원칙’ 상호 간에는 서열이 존재하지 않으며, 모두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
- ㉤ 조약과 관습은 이론상 동등한 권위를 가지기 때문에 양자의 규칙 사이에 충돌이 있을 시에는 기본적으로 신법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양자 모두 임의규범에 한함)

	㉠	㉡	㉢	㉣	㉤
①	○	○	○	×	×
②	×	○	×	○	○
③	○	○	×	×	○
④	×	×	○	×	○

2026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 경 정 (2교시) >

- 행정학(주관식) -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응시자 유의사항

- 본인의 응시계급, 교시, 과목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시험이 시작되면 신속히 페이지를 넘겨 인쇄 상태 등 파본여부를 확인바랍니다.
- 문제지에 이상이 있는 경우 교체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이를 확인하지 않거나 교체를 요구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의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성 명 :

응 시 번 호 :

해 양 경 찰 청

'26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주관식)

과목	행정학	응시계급	경정	응시번호		성명	
<p>1. 다음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서술형, 50점)</p> <p>해양경찰은 해양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다양한 치안·안전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이다. 해양경찰은 업무 성격의 다양성과 현장 중심 운영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개별 구성원의 업무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데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따라 직무 특성에 맞는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갖춘 인재를 구조·수사·함정운용 등 분야별로 경력 경쟁채용을 통해 선발하고 있다.</p> <p>이와 관련하여, (1) '경력경쟁채용의 개념, 장점 및 단점'과 (2) 경력경쟁 채용자 활용방안에 대해 '사회적 자본'을 통해 설명하고, (3) 조직 내 임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성원간 갈등에 대해 '토마스(Thomas)의 갈등해결 전략(갈등관리 유형)'을 활용하여 서술하시오.</p>							

'26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주관식)

과목	행정학	응시계급	경정	응시번호		성명	
----	-----	------	----	------	--	----	--

2. 다음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약술형, 25점)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는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부처별 성과책임을 높이기 위해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편성하여 성과지향 및 하향식(Top-Down)으로 운영하는 제도이다.

이와 관련하여, 해양경찰청의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에 대해 약술하시오.

3. 다음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약술형, 25점)

규제란 정부가 공익적 목적을 위해 법률에 근거하여 국민과 기업의 활동에 제한을 가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조치를 의미한다. 윌슨(J. Wilson)은 “정부규제 발생 시 비용과 편익의 분포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규제정치를 구분하고, 비용과 편익이 분산되는 경우보다 집중되는 경우에 정치활동이 활발해지고 이해관계자집단이 잘 조직된다.”고 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윌슨(J. Wilson)의 규제정치 모형을 약술하시오.